

북한의 공(公)과 사(私): 이론화를 위한 비교*

함택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1. 문제제기

인간사회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득세하면서 공공재로 간주되던 다양한 재화가 사적 재화로 전환되고 있다. 공기업의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사기업의 국유화(nationalization)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공과 사의 경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인 국가-투자자 소송제도는 국제적 수준에서 공적 영역에 위치하고 있던 분쟁해결절차가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진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적 영역이 형성되는 한 계기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5-079-BS0078).

공과 사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공과 사의 경계를 유동화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공과 사의 경계를 결정짓는 일반이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특정한 사회구성에 따라 공과 사의 경계를 결정하는 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고전적 사회주의체제’를 점진적으로 이탈해가고 있는 북한에서 공과 사의 경계가 재설정되는 과정을 이론화하려는 시론적 시도이다.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후로 한 공과 사의 경계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근대사회에서의 공과 사의 개념과 경계를 살펴보고, 사회주의사회에서 공과 사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고 북한 특유의 공과 사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2. 근대의 공과 사

공과 사의 구분은 사회로부터 경계가 분리되는 것보다 먼저 출현했다. 서구 사회에서 공과 사의 구분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다.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는 그 구성원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가정경제와 구별되었다. 가정은 폴리스와 달리 불평등 관계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에서 사적인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박탈된 상태’를 의미했다.¹⁾ 즉 고대 그리스의 정치공간은 자유시민을 위한 공적 영역과 필요(necessity)라는 기준과 긴밀히 연관된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적인 생활은 시장인 아

1) H. Arendt, *The Human Condition*(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8).

고라(agera)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때, 공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과 등치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 이 독특한 공적 영역의 형성은 자신들의 시민권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시민 대다수의 집합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민들은 노예와 혼혈인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로마법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던 중세시대에는 공적 영역이 공공 소유와 관련된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와, 사적 영역은 사적 소유와 관련된 레스 프리바투스(res privatus)와 등치되었다. 공적 생활은 일반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공식적 의무로 취급된 반면, 사적인 것은 기독교적 원리에 기반을 두었다.³⁾ 즉 중세의 보편적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인간본성을 갖는 세계인과 사적인 생활영역을 갖는 개인이라는 관념이 공존하고 있었다. 공적 권위체의 부재와 모든 사회형태의 기독교적 규범으로의 포섭으로 묘사될 수 있는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적 형제애가 공적인 것으로 전화되었고, 그 체제에서 봉건영주는 농노들에게 그들의 ‘사적’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국민국가의 접합으로 시작된 근대에서 공과 사가 구분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버마스가 부르주아 공공 영역이라고 부른 공간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공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반이익을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개방을 의미하고, 사적인 것은 가족과 친구들 관계로 한정되면서 보호되는 영역을 의미하게 되었다. 17세기 말에 이르러 이러한 공과 사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적인 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선 및 유기적 통치체(body politic)를 표상했다.⁴⁾ 그러

2) J.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Cambridge: Polity, 1989).

3) R. Sennet, *The Fall of Public Man*(Boston: Faber and Faber, 1977).

나 이 시민적(civic) 관점은 근대사회가 발전하면서 국가 행정부를 공적인 것으로, 시장을 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해석에 압도되기 시작했다.⁵⁾ 이 새로운 형태의 공적 영역, 즉 부르주아 공공 영역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국민국가가 접합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다.

우선 가장 높은 추상수준에서 자본이 본성상 공간적 제약으로 자유롭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치권력의 등장은 정치공간의 재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만약 앞서의 논의처럼 공간이 사회적 권력을 담는 그릇이고 이 공간의 재구조화가 특정 시점에서 사회관계의 재구조화와 연관되어 있다면, 당시 지배적 사회관계로 부상하던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국민국가, 그리고 국민국가의 공간적 정체성의 기반인 국민형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난점이 존재한다. 자본이 본성상 공간적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과 권력관계를 재구성하는 투쟁은 공간적 토대를 재조직하려는 투쟁이라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⁶⁾

이 모순을 인정한다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국민형태 및 국민국가를 단선적으로 연역하거나 그 역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⁷⁾ 극

4) *Ibid.*, pp.16~17.

5) 공사 구분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J. Weintraub, "The Theory and Poli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J. Weintraub and K. Kumar(eds.),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pp.1~38; J. Caporaso and D. Levine,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11~17; 구갑우, 『유럽통합의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정책: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3장을 참조.

6)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민·박영민 옮김(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291쪽.

7) E. Balibar, "The Nation Form," in E. Balibar and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London: Verso, 1991).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본주의는 국민국가 또는 국민 국가체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국민국가도 자본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을 수용한다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로부터 국민국가를 도출하거나, 그 반대로 국민국가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연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필요로 하는 국가형태 또는 정치형태가 사전에 결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국민국가의 공존을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접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민국가의 주요한 제도들인 관료제, 상비군, 조세체계 등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필연적 구성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플라니(K. Polanyi)의 표현을 따른다면, 이 접합은 화폐, 노동력, 토지 등과 같은 허구적 상품(fictitious commodity)을 통해 매개되었다. 그가 정확히 지적하는 것처럼, 이 허구는 시장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원리를 제공했다.⁸⁾ 즉, 이 허구적 상품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유통의 필수적 구성물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허구적 상품은 국민국가의 상징이었다. 화폐의 발행은 주권 그 자체를 표상한다. 노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정한 영토 내에서 시민권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토지는 국민국가의 고유한 속성인 영토성의 구체적 형태이다. 또한 생산된 상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실질적 계약이 성립되는 장소로 시장이 필요하다. 이 교환체계가 강도행위가 아니라 주고받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물리적 하부구조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체계가 자본가에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하부구조

8) K.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New York: Farrar, 1944).

를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로 기능했고, 국민국가 관료들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정치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 제도로 기능했다.⁹⁾ 따라서 자본이 자신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고정된 사회적·물리적 하부구조를 필요로 하는 순간, 자본은 공간의 생산에 의존적이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는 그것의 재생산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국민국가 내부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론적 문제가 남는다. 만약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국민국가와 접합되었다면, 이 국민국가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국가로 전화하는가의 문제이다. 근대국가를 묘사할 때, 각 이론가들의 정치적 관점 또는 이론적 필요에 따라 국민국가와 자본주의국가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¹⁰⁾ 이 이론적 문제는 근대사회에서 공적인 것의 등장과정에 대한 천착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국가의 기원에 대해 갈등론적 입장을 취하던 통합론적 입장을 취하던, 국가가 무장한 채로 등장했다는 점과 그것이 고유의 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¹¹⁾ 이 국가실체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9) P. Kapteyn, *The Stateless Market: The European Dilemma of Integration and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1996), pp.14~15.

10) 이 논의에 대해서는, E. Wright, "Models of Historical Trajectory: An Assessment of Giddens's Critique of Marxism"; B. Jessop, "Capitalism, Nation-State and Surveillance," in D. Held and J. Thompson(eds.), *Social Theory of Modern Societies: Anthony Giddens and His Cr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를 참조.

11) 국가의 기원에 관해서는, 조나단 하스, 『원시국가의 진화』, 최몽룡 옮김(서울: 민음사, 1989); J. Hall and G. Ikenbery, *The State*(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9); F.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Moscow: Progress Publishers, 1990); G. Deleuze and F. Guattari, *Anti-Oedipus*(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등을 참조.

형태를 수반하게 된다. 하나의 국가가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종별적인 사회구성 속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를 정의할 때, 국가가 사회 위에 존재하는 독립적 구조 또는 제도의 집합이라는 점과 동시에 이 제도들이 사회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집합체로서 근대국가는 국민국가인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필요한 정치적 기능을 제공하는 자본주의국가이다.

하버마스가 매우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완전히 발전된 부르주아 공공 영역은 모여서 하나의 공중을 형성하는 사적인 개인들이 담당하는 두 가지 역할, 즉 재산소유자로서 그리고 인간 일반으로서의 역할이라는 허구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다.¹²⁾ 이 부르주아 공공 영역의 이중성은 근대국가가 갖고 있는 이중성의 맹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대국가는 자본축적과 상품실현을 보증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교환관계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사적 영역이 강화되었고, 자본가들은 교회와 아직은 자본주의국가가 아니었던 절대주의국가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본가들은 친족(kinship)이나 후견인-가신(patron-client) 관계가 아니라 인쇄된 언어를 매개로 한 상상에 기초하여 서로를 결합한 최초의 지배계급이었다.¹³⁾ 자본가계급이 사적 영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공적 규제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은 공적인 것의 생산에 개입해야 했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은 국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자본

12) J.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p.56.

13)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London: Verso, 1983), pp.76~77.

가계급은 극장, 음악, 살롱, 소설, 비평과 같은 문화세계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공공 영역의 건설을 자극했고, 또한 국가가 여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회의 필요와 접촉할 수 있도록 이 공공 영역을 건설해갔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계급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안정적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경제적 자유를 보증할 수 있는 정치적 상부구조로 ‘의회주의적 개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공공 영역이 형성되어갔다.¹⁴⁾

그리하여 비판적이고 공개적인 논쟁의 장으로서 부르주아 공공 영역이 자본가계급의 집합적 이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국민국가 내부에 형성되었다. 자본주의가 그 힘을 점점 증가시켜가면서, 정열적 자본가들은 국가의 공적인 것의 생산에 더욱 깊숙하게 개입하게 되었고, 그 힘으로써 근대국가는 공공 영역이 그 내부에서 ‘제조되고’, ‘대량생산되는’ 자본주의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¹⁵⁾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구 국가들은 바로 이 공적인 것의 생산과정에서 초기 부르주아 공공 영역이 갖고 있던 비판적 개방성이 거세되면서, 다양한 공공재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대량생산된 근대국가였다.

공공재를 대량생산하던 국가자본주의체제의 국가들이 공과 사의 경계를 재설정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의 경제위기였다.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공과 사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데올로기는 공적 영역의 축소를 결과했다. 국영산업의 민영화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의 과정은 자본주의경제의 운영방향을 둘러싼 정치과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근대사회에서 공

14) J.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pp.57~88.

15) F.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London: Routledge, 1995), pp.101~105.

과 사의 경계는 ‘정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주의사회에서 공과 사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이 한 계급의 손에서 다른 계급의 손으로 이행한다는 사실은 혁명의 주요하고도 근본적인 표지이다. 또한 혁명은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전제주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지양을 목표로 했던 사회주의혁명도 이러한 혁명의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의 혁명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계급지배의 대체로서 자본주의 이전의 혁명은 본질적으로 소수자 혁명이었지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다수자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노동력의 상품화와 이에 기초한 자본의 성립이 이전 역사의 국지적 성격을 돌파하여 하나의 보편적인 세계사를 포괄하게 된다는 점과 하나의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가 보편적인 존재양식을 갖게 된다는 데서 구하고 있다.¹⁶⁾

또한 사회주의 혁명은 이행과정에 있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는 봉건사회의 틀 내에서 이론 또는 열망이 아닌 실제적 사회구조로 부르주아적 혁명 이전에 출현했다. 부르주아적 혁명은 이미 존재하던 사회관계에 대한 사후적 승인이었으며, 부르주아적 권력에 대한 최종적 보증이었다. 이른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16) 칼 마르크스, 『프랑스 혁명사 3부작』, 허교진 옮김(서울: 소나무, 1987).

과 동일한 것으로 사고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의 사회주의 공동체가 사회의 지배적인 질서로 전화하는 이행의 형태를 상정하고 있었다. 이는 소유형태의 대체만으로 다가올 미래를 상정하는 것이었다.¹⁷⁾

사회주의 혁명론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 프롤레타리아독재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이었다. 마르크스는 1875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고타강령에 대한 비판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혁명적 변혁의 시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과도기의 국가로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지양태로서 공산주의를 오랜 산고 끝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와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로 구분한다. 전자는 부르주아적 동등한 권리가 관철되고 사회 구성원이 노동자모만 간주되는 사회이다. 후자는 개인의 분업에 의 연속의 소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의 소멸, 노동이 삶의 제일의 욕구인 사회, 개인의 전면적 발전과 생산력의 성장이 이루어져 부르주아적 권리의 좁은 한계가 극복되는 사회로 정의되고 있다.¹⁸⁾

레닌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계승하여, 무정부주의자 및 사회민주주의자와의 투쟁 속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연성을 실천적으로 제시했다. 국가의 즉각적인 폐지와 부르주아의 저항의 분쇄를 위한 무력, 즉 국가라는 조직된 폭력의 사용을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자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부정하고, 부르주아 국가장치의 분쇄를 거부하는 동시에 국가의 사멸을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실천을 무시하는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자에 대해 레닌은 노동대

17) 베틸하임·스위지, 『사회주의 이행논쟁』, 박성규 옮김(서울: 들녘, 1988).

18)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김재기 옮김(서울: 거름, 1988).

중이 착취자를 억압하기 위한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와 노동대중 자신의 해방을 위한 사멸해갈 수밖에 없는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¹⁹⁾

마르크스와 레닌에게 있어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계급 없는 사회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인 사회주의를 표상하는 개념이고, 공산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관점에서 성립하는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정식화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시기는 아직은 인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로서 구(舊)사회의 잔재와 새로운 공산주의적 맹아가 투쟁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비국가의 통일체인 프롤레타리아국가의 계급지배가 여전히 관철되는 시기로 규정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 시기에도 계급투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주장이다.²⁰⁾ 이러한 계급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분리,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에 따르면 사회주의혁명 이후 필연적인 사회의 국가화 과정과 국가의 사회화 과정의 통일과 투쟁에서 국가의 소멸이 진척되는 것과 경제적 영역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포함한 실질적 사회화가 진전되는 것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의 핵심적 요소이다. 즉, 마르크스와 레닌을 응용한다면, 사회주의사회에서

19) 레닌, 『국가와 혁명』, 김영철 옮김(서울: 논장, 1988); N. Harding, *Lenin's Political Thought: Theory and Practice in the Democratic Revolution*(London: Macmillan, 1977); *Lenin's Political Thought: Theory and Practice in the Socialist Revolution*(London: Macmillan, 1981) 참조.

20) 이 시각에 입각한 소련 연구로는 C. Bettelheim, *Class Struggle in the USSR: 1917~1923*(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Class Struggle in the USSR: 1923~1930*(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참조.

공적인 것은 국가가 위로부터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사적 영역이 축소되지만,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공공성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과 사의 경계를 결정하는 힘은 근대사회와 같이 국가를 전제로 한 국가를 둘러싼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사멸을 준비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안에서 정치의 궁극적인 물질적 기초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이중지배이다.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서의 지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형태에서의 지배이다.²¹⁾ 이러한 이중적 지배의 타파를 위한 최초의 조치는 대자본의 국유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유화는 엥겔스에 따르면, 국가가 진정으로 사회 전체의 대표자로 등장하여 수행한 최초의 행동, 즉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가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최후의 행동이다.²²⁾

최초의 계기 이후 생산의 실질적 사회화과정은 모순적 제 계기가 중층적으로 결합된 불균등한 발전과정이다. 즉, 현상적으로 다양한 소유형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직접 생산자의 생산조건의 근본적인 변화, 즉 직접 생산자가 생산과정을 규제하는 능력의 향상과 규율의 제고 및 생산력의 발전을 수반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다양한 소유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회과정이다. 이는 소유가 더 이상 권력의 원천이 아닌 사회로의 전회를 의미한다.

21) 브라이언트 노동과정 그룹, “자본주의적 노동과정,” 브라이언트 노동과정 그룹, 『현대자본주의와 노동과정』, 고훈석 옮김(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6).

22) W. Brus,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Socialism*(London: Routledge & Kegan, 1973); *Socialist Ownership and Political System*(London: Routledge & Kegan, 1973).

실질적 사회화 과정은 대중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관리에서 대중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적 의사의 수렴과 결집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 없이는 수행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함으로써 공적 영역을 형성하고 사적 영역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기대를 배반했다. 러시아 혁명 직후 볼셰비키의 경제영역에서의 강령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노동자에 의한 통제와 기간산업의 국유화였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고, 이것이 혁명 이후 경제적 혼란을 야기한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 두 노선을 통일하는 조직체가 최고경제위원회였다. 전시공산주의를 거치면서 노동의 군사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에 의한 통제는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국가에 의한 통제가 노동자에 의한 통제를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시공산주의를 비정상 상태로 간주하고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수정하려 한 것이 레닌의 신경제정책이었지만,²³⁾ 결국 노동의 군사화를 기본으

23) 신경제정책에 대해서는, 中山弘正 編著, 『ネップ經濟の研究』(東京: 御茶の水書房, 1980); 모리스 뒤, 『소련경제사』, 임휘철 옮김(서울: 형성사, 1989), 6장 참조. 레닌의 경제발전노선과 스탈린의 경제발전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레닌 외, 『레닌의 반스탈린 투쟁』, 김진태 옮김(서울: 신평론, 1989). 스탈린의 노선은, プレオブラジェンススキイ, 『新しい經濟』, 救仁郷繁 譯(東京: 現代思潮社, 1976) 참조. 1956년 북한에서 벌어진 이른바 ‘8월 종파사건’도 경제발전노선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라는 점에서 1920~1930년대 소련에서 벌어진 논쟁의 복사판이었다. 간략한 언급으로는, 기광서, “북한의 국가와 유일체제의 수립,” 박재규 엮음,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서울: 법문사, 2007).

로 하는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인 스탈린주의 노선이 선택되면서 현실 사회주의에서 공적 영역은 국가에 의한 통제와 동일시되었다.

4. 북한의 공과 사

사적 영역의 형성은 ‘개인’의 탄생과 동의어일 수 있다. 1992년 북한에서 간행한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개인’을 “개별적인 사람을 집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²⁴⁾ 이 정의에 부합하는 인용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소설 『1932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우리 개인은 비록 죽더라도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단 말이요. 그 속에 우리들의 참된 삶의 보람이 있단 말이요.

위의 정의와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 개인은 집단의 대립어로 제시되고 있고,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는 집단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개인과 집단은 분리될 수 없다. 개인의 단순한 합이 집단이라고 정의하거나 집단이 개인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체성을 보유했다고 정의할지라도, 개인과 집단 양자의 정의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집단을 우위에 두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서도 개인의 존재를 부

24) 각 개념에 대한 정의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참조. 2007년 『조선말대사전』의 증보판이 발간되었다.

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북한은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고, 그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인소유를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의 부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적 소유 내지는 집단적 소유의 연장으로 개인소유를 보고 있는 것이다.²⁵⁾

북한에서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북한 특수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주체로 규정된다. 즉, 개인은 보편적 의미를 지니는 개별적 공민이다. 북한에서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자본주의사회처럼, 개인의 ‘사적(私的)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개인소유는 사적 소유가 아니다. 생산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 소유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적 소유를 인정할 때 파생적으로 만들어지고 결국 사적 소유를 규율하게 되는 ‘사법(私法)’은 ‘넓은 사회에서’ 개별적 공민들 사이의 계약관계, 재산관계, 신분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사법은 ‘부르조아법용어’이다. 개별적 공민은 인정하지만, 공과 사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논리적으로 개별적 공민의 존재를 사적 영역의 존재와 등치할 수는 없다. 즉,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공과 사의 구분을

25) 북한의 정의는,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참조. 개인소유에 대한 고전적 사회주의체제에서의 해석은,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이 흡수하는 사회주의사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적 형제애를 공적 영역으로 하고 영주와 농노의 관계를 사적 영역으로 설정했던 서양의 중세사회 그리고 공적인 것을 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선 및 유기적 통치체(body politic)로 간주하고 사적인 것을 가족과 친구의 관계로 한정했던 서양의 근대 초기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즉, 북한에서 사적 영역의 출현은 서양에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사적 영역의 출현과 비교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공과 사의 개념을 사용할 때 불가피하게 서구적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서구적 의미에서 공과 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²⁶⁾ 첫째, 공적인 것이 국가의 업무를 뜻한다면 사적인 것은 국가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둘째,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의 익명적인 집단적 사회성(sociality)으로부터 공적인 사회성이 부재한 익명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공과 사를 정의할 수 있다. 전자의 정의는 국가를 공적인 것으로 시장을 사적인 것으로 정의하려는 자유주의적 해석에 가깝다.

1990년대 이전까지 개혁의 경험이 거의 없이 고전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의 사적 영역의 주된 구성부분은 가족이었다. 그러나 가족마저도 집단주의라는 국가적 규율의 제도화된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해왔고, 부분적으로는 공적 영역에 통합된 상태로 존재해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규모 아사사태에 직면하여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자구적인 차원에서 축

26) 필립 아리에스, “‘사생활의 역사’를 위하여,”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책임 편집, 『사생활의 역사 I』(서울: 새물결, 2000).

발된 ‘장마당’의 활성화로 표상되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가 분산적으로 전개되어왔다.²⁷⁾

또 이 과정에서 국가주의에 의해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유지해왔던 공적 영역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재조정 압력을 가중시켰고, 사적 영역의 질적 변화와 구성부분들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한 주민 최저생계의 보장이라는 물질 토대에 근거하여 사적 영역 자체를 형해화할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해왔던 공적 영역은 그 물질 토대의 와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적 영역의 확대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한 탈북자의 증언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 경제를 도입하던 전 시기에는 북한 주민 99%가 종전에 당이 제시하는 정책집행에서 그대로 했다가는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의 머리가 물질 위주가 되고 둘째가 정치지, 정치에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 자본주의적인 장사를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다(PS-2).²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 이 변화를 반영하여 이른바 ‘실리주의’가 논의되기도 했다.²⁹⁾

27)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6). 장마당의 역사에 대해서는, 구갑우·최봉대,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4) 참조.

28) 분류번호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면담자료이다(부표 참고). 이하 동일함.

29) 이른바 ‘실리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서울: 선인, 2004); 김창희, “김정일시대 북한의 체제유지와 실리사회주의,” 『북한연구학회보』, 9권 2호(2005); 김근식, “김정일시대 북한의 신

실리주의가 나온 것은 2000년 4월부터 중앙에서 하부말단까지 지시로 내려와서, 방식 내용을 기밀문건을 받아가지고 보면, 2000년 4월 정도에 경제관리에서 실리주의 원칙을 앞세우면서, 실리주의라는 것은 국가에 손해를 주지 않고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자체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결국은 국가에 손을 내밀지 말라는 것이고, 국가는 또 하부말단을 경제적으로, 물질 지원을 해주고, 대안의 사업체계대로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법이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래가 자체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실리주의라고 한 것이다. 거기에서 보면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맞게 살아갈 수 없는 공장 기업소는 폐기하고 국가에 손해를 주는 단위는 기구체계를 다 개편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 이때부터 당의 영도가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PS-2).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제한적 시장화’를 허용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사적 영역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계기가 되었다. 이 조치는 사적 영역의 성장에 의한 공적 영역의 침식을 저지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제도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기 위

발전전략: 실리사회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권 4호(2003) 등을 참조. 연구자들이 실리주의 또는 실리사회주의의 출현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글 가운데 하나가,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2001.10),” <http://nk.chosun.com>이다. 그러나 이 문건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김정일의 글을 모은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선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에 실려 있지 않다. 제일 조선인 학자 강일천의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전반적 가격과 생활비의 개정조치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2002)에서 이 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글이 실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2001년 11월 22일자에 실린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 나가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할 종자”에도 이 글의 일부가 언급되고 있다.

한 국가적 기획의 일단이었다.³⁰⁾ 이 조치는 시장화에 의해 추동되는 사적 영역의 형성을 국가가 불가피하게 승인하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즉,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는 비록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있기는 하지만 시장화를 매개로 한 사적 영역이 형성되었고, 어떤 식으로든 공적 영역과 제도화된 수준에서 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시장이 재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은 기존 공적 영역의 축소 및 사적 영역의 확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계기이다. 하이에크적(Hayekian) 시각에서 ‘발견의 절차’로 정의될 수 있는 시장³¹⁾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의 맹아가 될 수 있다. 즉, 새로운 ‘물질문명’의 등장은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critical) 변화라는 것이다. 이 변화는 북한에서의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성’ — 예를 들어, 조선로동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의 조직에서의 강연회, 강습회, 생활총화 등등 — 이 새로운 물질문명의 등장을 계기로 약화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게 한다.

30)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조치는 국가의 책임 회피로 해석되기도 했다. “새경제의 기본 첫째 문제는 국가 수준 자금유통이 안 되니깐 지역단위로, 자체적으로 살아나가기라는 것이고, 국가는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고, 둘째는 백성들의 원성이 당이나 국가에 자꾸 집중되어 당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이제는 지역단위에 책임을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PS-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시장경제의 확산 그리고 경제관리 체제에 대해서는,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농민시장의 진화와 사적 경제영역의 형성,”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7) 참조. 위 논문에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 성과가 정리되어 있다.

31)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개인의주의와 경제질서』, 박상수 옮김(서울: 자유기업센터, 1998).

도시시장을 매개로 한 공적인 사회성의 약화는 ‘집단심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프랑스의 아날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집단심성의 역사는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등등의 변화와 달리 아주 느리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은 ‘반미주의’와 결합되어 북한 주민의 집단심성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고 현재도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확산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 시장의 확산으로부터 사적 영역을 직접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도시시장의 확산이 국가적 수준에서의 집단심성의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도시 시장의 확산은 부(富)의 재편 및 집중을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부를 추구하거나 새로이 부를 축적한 계층은 자신들의 부의 유지 및 향유를 위하여 ‘사생활’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다음과 같은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도 2003년에 와서는 이제는 돈이 활개를 치고, 판을 치는 자본주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나쁜 아니라 중앙당 위원, 내각 위원이 이제는 그 생각을 한다. 내가 이 시기에 돈을 못 벌면 앞으로 루마니아 사태나 동독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자리를 뜬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문제가 골칫거리다(PS-2).

이 새로운 계층의 사생활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집단과 유리된 개인의 독립성을 추구하게 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적 존재에 몰두하게 되는 ‘인간적 자아’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주민의 ‘가격’에 대한 인식도 집단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국가가격과 시장가격의 이중이었다. 새경제 이후 가격이 흰쌀 40원, 강냉이 22원, 강냉이쌀 25원, 감자 2원, 이것이 양곡가격이고, 시장가격은 흰쌀이 지금 현재 가격이 1,200원, 강냉이 600원, 강냉이쌀 800원, 감자 100원. 국가가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0원, 시장가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달에 최소 5,000원 이상이 필요했다(PS-2).

가격과 이윤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도 있다.

천이 열 통구리가 있다. 우리가 총 1톤인데, 열 통구리다. 하나는 소파 천이고 하나는 또 여름 천이고, 하나는 속내 천이다. 이러면 1미터씩 다 자른다. 1미터씩 다 잘라서 저울에 떠보는 거다. g수로, g수로 뜨면 거기에 천 통구리마다 키로 수가 나와 있다. 이 천은 1미터가 1키로다. 그러면 이 천 가격을 때리는 거다. 딱 1미터만 잘라서 무게 측정을 한다. 돈을 때리는 거다. 내가 팔아야 될 이윤까지 태우는 거다(PS-28).

북한에서 사적 영역의 출현을 예시하는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사적인 것 또는 사생활이 시공간을 관통하면서 가지는 의미는, ‘외부로부터의 침범이 배제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외부는 북한적 맥락에서 ‘국가’ 또는 ‘국가에 의해 조직된 집단’일 것이다. 따라서 사적 영역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시장과 같은 자생적 질서와 더불어,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거나 국가의 통제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사적 영역은 ‘공간의 정치’를 통해 생산된다. 이 공간은 공개적이지만 기존 도시공간의 재정의를 통해 특별한 장소로 출현할 수 있다. 도시시장이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공개적이지 않은 ‘은밀한 공간’도 사적 영역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공적 공간 가운데 하나가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에서는)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근로자 학습을 조직한다. 도서관에서 공고를 내붙인다. 다음날 무슨 제목을 가지고 문학창작의 수법, 글쓰기 방법이라든가, 컴퓨터 발전 추세와 미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아무개 대학의 무슨 선생이 강의를 한다고 공고를 내붙인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 강의에 출연을 한다고 해서 따로 보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명예문제이다(PS-10).

이 도서관에서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은 사적 공간으로 이동했다. 자기 돈으로 국수를 사먹을 수 있는 ‘신흥관’이나 도서관의 공개홀이나 ‘집’에서 세계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집이라는 공간이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후로 하여 돈을 번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거나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다(PS-26). 그 집은 국가의 승인을 받고 건설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가 되지만, 거래되는 상품이였다.

집이라는 은밀한 공간은 사적 교환관계를 매개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불법적인 여가’ — 예를 들어 자본주의사회의 책, TV, 비디오물 등등을 보는 행위 — 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장마당을 통해 유통되는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은밀한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은밀한 공간은 기존

건축물 또는 새로운 건축물 내부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로 집을 지을 경우, 지하를 파다는 증언들이 많은 탈북자를 통해 나오고 있다. 즉, 방 둘과 부엌 하나로 이루어져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았던 북한 주택의 변화가 도시시장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공개적 공간과 은밀한 공간을 매개로 또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도 하는, 기존의 집단적 관계망을 벗어난 사적 관계망이 형성될 때, 비로소 사적 영역을 위한 조건들이 구축된다. 이 사적 관계망은 도시시장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기존의 집단생활이 아닌 새로운 친구관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공과 사의 경계를 재설정하게 하는 힘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인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정치가 시장에 반응하고 있다.

5. 결론에 대신하여

고전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에서는 자생적 질서로서 도시 농민시장이 발전하면서 공과 사의 경계가 변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도 농민시장을 매개로 형성되고 있는 사적 영역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도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도 북한당국은 가능하다면 사적 영역의 확산을 막으려 하고 있다. 사적 영역의 확산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촉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농민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화폐와 상품의 증가가 자본으로의 전환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은

단순한 화폐의 집적이 아니라 사회관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북한에서 투자결정의 사유화를 포함한 자본의 시초축적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면 북한이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영역은 이 이행을 매개하는 심층에 놓여 있는 공간이자 이행의 동력이 될 것이다.

<부표> 피면접자 코드와 기초 인적 사항

코드	성별	연령대	직업	면접횟수
PS-1[PS-1-1]	여	20대	외화별이	2
PS-2[PS-2-1~PS-2-5]	남	40대	관리직	6
PS-3	여	40대	사무직	1
PS-4	남	40대	전문직	1
PS-5[PS-5-1~PS-5-3]	남	30대	전문직	4
PS-6	남	30대	외화별이	1
PS-7	여	40대	주부	1
PS-8	남	60대	노동자	1
PS-9[PS-9-1]	남	30대	사무직	2
PS-10[PS-10-1~PS-10-2]	남	40대	전문직	3
PS-11[PS-11-1]	남	40대	외화별이	2
PS-12[PS-12-1]	남	20대	노동자	2
PS-13	남	40대	노동자	1
PS-14	남	50대	전문직	1
PS-16	남	30대	노동자	1
PS-17	남	50대	노동자	1
PS-18[PS-18-1~PS-18-2]	남	30대	전문직	3
PS-19[PS-19-1]	남/여(부부)	30대/20대	관리직/노동자	2
PS-20	남	30대	관리직	1
PS-21	남/여(부부)	30대/20대	관리직/노동자	1
PS-22	여	20대	전문직	1
PS-23	남	30대	전문직	1
PS-24[PS-24-1]	남	40대	관리직	2
PS-25[PS-25-1]	남	30대	노동자	2
PS-26[PS-26-1]	여	50대	사무직	2
PS-27	여	30대	노동자	1
PS-28[PS-28-1~PS-28-3]	남	30대	사무직	4
PS-29[PS-29-1~PS-29-3]	여	40대	주부	4
PS-30	남	60대	관리직	1
PS-31	여	30대	기타	1
PS-32	여	30대	주부	1
PS-33[PS-33-1~PS-33-3]	남	40대	노동자	4
PS-34[PS-34-1]	남	30대	전문직	2
PS-35[PS-35-1]	남	40대	노동자	2
PS-36[PS-36-1~PS-36-2]	여	50대	외화별이	3
PS-37	남	60대	전문직	1
PS-38	남	40대	관리직	1
PS-39	남	30대	노동자	1
PS-40[PS-40-1]	남	40대	전문직	2

주: 면접조사 진행과정 중 피면접자 코딩작업의 착오로 PS-15는 결번처리함.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전반적 가격과 생활비의 개정조치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2002).
- 구갑우, 『유럽통합의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신편책: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 구갑우·최봉대,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4).
- 기광서, “북한의 국가와 유일체제의 수립,” 박재규 엮음,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서울: 법문사, 2007).
- 김근식, “김정일시대 북한의 신발전전략: 실리사회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권 4호(2003).
- 김창희, “김정일시대 북한의 체제유지와 실리사회주의,” 『북한연구학회보』, 9권 2호(2005).
- 뎀, 모리스(M. Dobb), 『소련경제사』, 임휘철 옮김(서울: 형성사, 1989).
- 레닌(V. Lenin), 『국가와 혁명』, 김영철 옮김(서울: 논장, 1988).
- 레닌(V. Lenin), 『레닌의 반스탈린 투쟁』, 김진태 옮김(서울: 신평론, 1989).
- 마르크스(K. Marx), 『프랑스 혁명사 3부작』, 허교진 옮김(서울: 소나무, 1987).
- 마르크스·엔겔스(K. Marx and F. Engels),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 김재기 옮김(서울: 거름, 1988).
- 베델하임·스위지(C. Bettelheim and P. Sweezy), 『사회주의 이행논쟁』, 박성규 옮김(서울: 들녘, 1988).
- 브라이튼 노동과정 그룹, “자본주의적 노동과정,” 브라이튼 노동과정 그룹, 『현대자본주의와 노동과정』, 고훈석 옮김(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6).
- 아리에스, 필립, “‘사생활의 역사’를 위하여,” 필립 아리에스·조주 뒤비 책임편집, 『사생활의 역사 I』(서울: 새물결, 2000).
-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서울: 선인, 2004).
-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 도

시의 위기와 변화』(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6).

_____, “북한의 도시 농민시장의 진화와 사적 경제영역의 형성,”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7).

하비, 데이비드(David Harvey),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화·박영민 옮김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하스, 조나단(J. Haas), 『원시국가의 진화』, 최몽룡 옮김(서울: 민음사, 1989).

하이에크, 프리드리히(Friedrich August von Hayek), 『개인의 자유와 경제질서』, 박상수 옮김(서울: 자유기업센터, 1998).

북한 문헌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선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 일본문헌

中山弘正 編著, 『ネット經濟の研究』(東京: 御茶の水書房, 1980).

プレオブラジェンスツキイ, 救仁郷繁 譯, 『新しい經濟』(東京: 現代思潮社, 1976).

3. 외국 문헌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London: Verso, 1983).

Arendt, H., *The Human Conditio*(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8).

Balibar, E., “The Nation Form,” in E. Balibar and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London: Verso, 1991).

Bettelheim, C., *Class Struggle in the USSR: 1917~1923*(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_____, *Class Struggle in the USSR: 1923~1930*(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Brus, W.,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Socialism*(London: Routledge & Kegan, 1973).

_____, *Socialist Ownership and Political System*(London: Routledge & Kegan, 1973).

Caporaso, J. and D. Levine,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1992).
- Deleuze, G. and F. Guattari, *Anti-Oedipus*(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 Engels, F.,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Moscow: Progress Publishers, 1990).
- Habermas, J.,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Cambridge: Polity, 1989).
- Hall, J. and G. Ikenberry, *The State*(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9).
- Harding, N., *Lenin's Political Thought: Theory and Practice in the Democratic Revolution*(London: Macmillan, 1977).
- _____, *Lenin's Political Thought: Theory and Practice in the Socialist Revolution* (London: Macmillan, 1981).
- Kapteyn, P., *The Stateless Market: The European Dilemma of Integration and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1996).
-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Jessop, B., "Capitalism, Nation-State and Surveillance," in D. Held and J. Thompson(eds.), *Social Theory of Modern Societies: Anthony Giddens and His Cr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New York: Farrar, 1944).
- Sennet, R., *The Fall of Public Man*(Boston: Faber and Faber, 1977).
- Webster, F.,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London: Routledge, 1995).
- Weintraub, J., "The Theory and Poli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J. Weintraub and K. Kumar(eds.),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Wright, E., "Models of Historical Trajectory: An Assessment of Giddens's Critique of Marxism," *Social Theory of Modern Societies: Anthony Giddens and His Cr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4. 비학술지, 웹자료

김정일, 2001년 10월,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http://nk.chosun.com>.

『민주조선』, 2001년 11월 22일,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 나가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자”.

A Comparative Study for Theorization of the Public-Private Sphere in North Korean Society

Hamm, Taik-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Koo, Kab-Woo(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article aims at taking a new approach towards theorization of how the boundary of the public-private sphere is re-established in the North Korean society, which is gradually breaking away from the “classical socialist system”. In our article we will focus on changes incurred to the public-private boundary before and after the “7·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 in 2002. We will firstly outline the concept and the boundary of the public-private sphere as defined in a modern society, vis-a-vis public-private relationship in a socialist society. Secondly, we will explore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public-private relationship unique to the Socialist North Korea.

Keywords: North Korea, Public-private sphere, Classical socialist system,
7·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